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론과 비판언론학 비판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신자유주의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 큰 흐름이 되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한국 저널리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비판언론학이 한국 언론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데 소홀했음을 분석했다.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모든 논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저널리즘과 연관지어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비판언론학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론학계 내부의 상호비판에도 나서 저널리즘 현장과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제안했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비판언론학, 저널리즘

1. 문제 제기

“한때 시대정신을 선도했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저술활동은 쓴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들만 읽는, 틀에 얽매인 지루한 논문들로 대체되고 있다. 학자는 ‘논문 작성 노동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인의 죽음이 어른거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풍경이다.”

* 2020gil@hanmail.net

『경향신문』이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제하에 연재한 기획물의 결론이다(2007년 4월 23일자). 기사는 한 계간지 편집장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학술지 또는 계간지에서 그야말로 ‘재미있는’ 글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담론 논쟁을 주도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다. 모두 학진(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심지어는 같은 전공자들도 안 읽어줄 글을 쓰느라 밤새고 있기 때문이다.”

도발적 문제 제기다.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학자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 마감 맞추는 걸 가리키는 말”이라고 혹평한다.¹⁾

연구자가 신문에 실린 기획기사—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연재 기획은 책으로도 발간됐다—를 논문의 들머리에 굳이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비판언론학계가 발행하는 『한국언론정보학보』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심지어는 같은 전공자들도 안 읽어줄 글”이라는 평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들은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 마감 맞추’려고 ‘밤새고 있’는 학자들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열린 마음으로 성찰해보자는 의도다.

한국 사회는 물론, 대학가 전반이 그렇듯이 언론학계에도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큰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점을 어디부터 설정할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고, 더러는 197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강내희, 2008, 239~240쪽), ‘신자유주의 시대’로 규정할 시점은 아무래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이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로 그 이후 한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왔고 ‘평생직장’ 개념이 시나브로 사라져왔다.

1) 기사가 전한 프랑스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도 학술진흥재단 중심의 학계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전 에세이식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진 체제 아래서는 빛을 볼 수 없어요 학진은 정형화된 논문식 글쓰기밖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향신문』 기획기사는 이어 “한 시대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저술, 그 저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라는 지식사회의 풍경은 볼 수 없게 된”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고 있거나, 그 현상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하며 불가항력적 흐름으로 수용하는 데 있다. 2008년 9월, 신자유주의가 ‘종주국’인 미국의 금융위기로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는데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그 연장선이다.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는 데 일차적 책임은 한국 언론에 있는 데도, 정작 언론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비판언론학은 신자유주의를 앞장서서 전파해온 한국 언론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데 소홀했다는 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 논문은 한국 저널리즘이 신자유주의의 틀에 갇힌 현상을 구체적인 언론 보도 양상으로 분석하고, 비판언론학이 그 흐름에 어떤 구실을 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뒤, 앞으로 비판언론학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연구 방법

한국 언론학계는 1988년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조직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소수의 젊은 연구자들로 출발했던 연구회는 경험론적 실증주의 중심이던 언론학 영역에 비판언론학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학문적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증진시켰다(김서중·김은규, 2008). 더구나 1998년에는 연구회의 틀을 벗고 ‘한국언론정보학회’로 거듭났다.

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효성(2008)은 창립 당시의 ‘비판언론학’이라는 패러다임은 비판이론에 근거했지만 통일된 이론이 아니었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론적 차이가 있음에도 공통의 끈으로 묶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 질서가 부정의와 모순으로 차 있어 더 나은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라고 밝혔다.

기실 비판언론학의 연구 대상이나 비판 대상은 커뮤니케이션 현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판언론학은 “부정의와 모순으로 차 있는” 현실을 일상적으로 틀 지워가는 저널리즘과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비판언론학이 신자유주의를 분석할 때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연구과제 1. 신자유주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비판해야 하는가.

연구과제 2. 신자유주의 현실을 언론은 어떻게 담아냈는가.

연구과제 3. 신자유주의 현실을 학계는 어떻게 담아냈는가.

비판언론학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 논문은 연구과제 2와 3을 중심으로 삼았다. 연구과제 1은 비판언론학 이전에 비판 이론의 더 넓은 영역에 속하고 연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을 아예 건너뛸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것을 담아내는 언론과 학문을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등장한 대처와 레이건 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케인스주의의 복지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에 부닥칠 때, 그 위기 타파를 명분으로 추진한 자본의 공세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온 결과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걸 ‘자유 시장’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에 대한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 체계의 해체를 강력히 추진했다.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우호적인 언론계와 학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담론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갔다. 가령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에서 구현되기 시작할 무렵에 한국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레이거노믹스를 ‘공급중시 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신자유주의들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실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난에 이은 붕괴가 큰 몫을 했다(손석춘, 2008).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민중 개개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적극 공세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고, 그것이 신자유주의 전성기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복지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국민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실은 그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상적 이론이 실제 현실에 구현될 때 사용한 전략은 모든 것의 시장화였다(Harvey, 2005). 하비가 자본가들이 계급 권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이었다고 분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이론가들은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보편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계급의 자유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종래의 자유주의보다 더 노골적이다.²⁾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병든 세계를 치유할 불가사의한 힘을 ‘시장’에 부여하는 고도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Moody, 1997, p.195).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자본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이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한 정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공통된 귀결은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이다(강상구, 2000, 116~118쪽). 신자유주의가 진행된 1980년대에 부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을 벌었다.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까스로 만들어진 복지체제를 파괴했고, 가장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복원시켰다(Dume’nil, 2005, pp.12~13). 『뉴욕타임스』의 보수적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조차

2) 바로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란 개인 기업들이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감시와 통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부활시킨 데서 비롯된 용어(Schiller, 1999, p.30)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맥도날드는 맥도넬 더글러스(팬텀기를 제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없이는 번성할 수 없으며 (...) 실리콘 밸리의 기술이 번창하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주먹은 미합중국 육군, 공군, 해병대”라고 썼다 (Roy, 2002, p.82).

비판이론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는 “부정의와 모순으로 차 있어 더 나은 사회로 바뀌어야” 할 현실임에 틀림없다. 그 전제에서 결국 이 논문이 집중해서 다룰 연구 과제는 신자유주의 현실을 한국 저널리즘과 언론학계가 어떻게 담아냈는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그럼에도 연구 과제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근거해 ‘신자유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저널리즘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밑절미로 비판언론학의 연구 경향을 짚어보는 데 국한했다.

3. 신자유주의와 한국 저널리즘 분석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양극화를 비롯해 여러 차원의 불균형이 누적되어왔다. 더구나 2008년 들어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이미 전두환 정권 시기에 공급중시 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레이저노믹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신자유주의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본격 전개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다. 바로 비판언론학계가 한국언론정보학회 이름으로 다시 출발한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탈규제, 개방화, 민영화, 정리해고 도입’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뼈대다.³⁾

3) 흔히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바라보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크게 갈라져 있어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가치 판단 이전에 신자유주의로 나타난 현상에는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의 자본시장과 무역시장을 철저히 ‘자유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1990년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담합’한 논리 그대로다(Stiglitz, 2006, p.81).⁴⁾

이미 1998년 9월 한국에서 열린 ‘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개념 정의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전략으로, 민중을 단지 생산과 소비의 한 요소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개인, 계급, 국가와 지역 사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1998, 6~7쪽).

신자유주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2008년 2월 공식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여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이해영, 경향신문, 2008년 1월 2일자). 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감세, 복지 축소, 작은 정부가 그것이다.

- 4)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개혁 처방’으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시장 경제체제, 곧 신자유주의 확산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를 ‘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아 정부 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를 강권하는 정책이다. 상대국가에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집권 핵심부의 부패와 비리를 드러내 ‘중도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방조하고 그 정부가 구조 조정에 나서게 하는 전략도 담겨 있다.
- 5) 경제학계에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보편성을 갖는가에 부정적 시각도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복지 국가 경험도 전혀 없는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30년 넘게 지배적 흐름을 형성한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적 특징들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뿌리내렸다고 보는 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합의다. 보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진보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차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노골화한 기득권 중심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르다고 분석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는 한국 현실에서 빚어진 신자유주의의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대기업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해온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규모와 강도가 다르게 전개되었다. ‘기업친화’적 노동정책에 더해 준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노조 길들이기’도 예고되었다.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자 자본의 숙원사업이었다.

문제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 전개되어 실제 사회경제를 바꿔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대다수 사회구성원에게 개념조차 낯선 말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집권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대통령 선거일을 닳새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방송에 나와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듯 부정했다.⁶⁾ 박희

극단적 형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 6) 2007년 12월 14일 『원음방송』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박희태 상임고문은 진행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진행자= 경제를 살리는 게 지상명령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BBK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7대 경제 강국 진입),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터놓고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자면? 박희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즉흥적으로 내건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경선 전부터 여러 경제학자들, 정책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진행자= 7·4·7 경제를 약속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굳히기에 들어서서 그런 건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부쩍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한미 FTA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적극 찬성하는 거죠?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박희태 상임고문께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박희태= 신자유주의요? 그 신자유주의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진행자= 주주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나 이런 거보다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만 우선하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기업에서 순이익을 많이 얻어도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이 최근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박희태= 글썄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신자본주의라고 하니까 자본가만 그런 경제체제입니까? 진행자= (신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요. 처음 들어보세요? 박희태= 네. 저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초기 자본주의 모양으로 절대적인 자유

태가 신자유주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 못 하겠다”면서 방송 진행자에게 반문한 대목을 보자. 그는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양으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초기 자본주의, 그야말로 그런 경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가에서 ‘달변의 논객’으로 소문난 정치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지금 모든 국민에게 근로자든 서민층 까지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현대 국가의 이념”이라고 단언했다.

바로 그 지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박희태의 발언처럼 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현대 국가의 이념이다. 그럼에도 그가 지적했듯이 “그것을 뿌리치고 과거로 회귀해서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자본의 논리만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논리, 바로 그것이 신자유주의다.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신이 신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지 않는다.⁷⁾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일차적 현실 규정자인 저널리즘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외면해온 데 큰 원인이 있다. <표 1>은 최근 1년 동안 언론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배제되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대상으로 신자유주의가 불려온 사회 양극화에 소극적 보도를 해온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을 하나씩 선택했다. 그와 비교할 신문으로 흔히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분석했다.

연구는 2007년 5월 1일에서 2008년 5월 1일까지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를 누리는 초기 자본주의, 그야말로 그런 경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지금 모든 국민에게 근로자든 서민층까지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현대국가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과거로 회귀해서 자본주의 초기단계로 돌아가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같아서 저는 그 개념이나 말씀하신 데에 대한 동의를 섰ť 하기 어렵습니다(손석춘, 2008).

- 7) 물론, 박희태로 예시되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인들이 정말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큰 문제 아닐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해결하려고 부심하는 문제를, 집권당의 대표가 아예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다.

<표 1> ‘신자유주의’가 노출된 뉴스 기사 비율(2007년 5월 1일~2008년 5월 1일)
(단위: 건)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51,566	42,083	45,441	58,721
신자유주의	63	75	366	308
비율	0.12%	0.18%	0.81%	0.52%

네 신문을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신자유주의 문제가 사회구성원 사이에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2008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5월 2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그 이전의 1년은 여야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곧이어 대통령 선거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총선까지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의제설정이 중요한 시기였다. 각 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부터 새 대통령의 취임과 총선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국회 비준 문제가 겹쳐 가장 큰 쟁점이 ‘경제 살리기’였기에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의제화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시기다. 5월2일 이후 벌어진 촛불 집회에서 신자유주의가 ‘거리의 의제’로 등장한 시기와 비교하는 데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 정국의 최대 쟁점은 ‘경제 살리기’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언급한 기사가 『동아일보』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12%대에 머물렀다. 가장 많이 언급한 『한겨레』조차 전체기사의 1%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흐름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은 직후부터 10년 동안 전체 기사에서 ‘신자유주의’가 노출된 빈도를 분석해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⁸⁾

8) 다만 특이할 점은 『경향신문』의 신자유주의 뉴스 기사 비율의 차이다. 외환위기 뒤 1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노출된 기사비율이 0.22%였지만, 대선과 총선이 있던 최근 1년 동안은 0.52%로 늘어났다. 이 점은 신문의 자본 성격이 바뀌면서 지면 내용이 점점 변화해온 사실을 시사해준다.

<표 2> 10년간(1998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신자유주의 뉴스 기사 비율
(단위: 건)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448,070	361,288	408,550	446,944
신자유주의	561	684	2,073	962
비율	0.13%	0.19%	0.51%	0.22%

<표 3> 1년간 신자유주의 사설 비율
(단위: 건)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915	931	959	948
신자유주의	0	1	10	14
비율	0%	0.11%	1.04%	1.48%

비단 뉴스만이 아니다. 신문 편집의 방향이 드러나는 사설을 보면 문제점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사설이 아예 없거나 단 1건이다(<표 1>과 같은 기간). 신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를 사설의 논의 전개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선거 공론장에서 핵심 쟁점을 외면한 셈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신자유주의를 다룬 사설은 지극히 적다.

같은 기간에 사설 아닌 칼럼과 논단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절대적으로는 미미하다. 문제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그나마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칼럼과 논단들이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적극 찬성하는 데 있다.

<표 4> 1년간 신자유주의 칼럼·논단 비율
(단위: 건)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2,370	1,839	1,836	2,026
신자유주의	21	9	81	71
비율	0.89%	0.49%	4.41%	3.50%

<표 5> 동아일보 신자유주의 칼럼·논단 비율

(단위: 건)

구분	찬성	중도	비판	계	비판 비율
내부필자	12	3	0	15	0%
외부필자	4	1	1	6	16.67%
계	16	4	1	21	4.76%

구체적으로 『동아일보』의 신자유주의 칼럼이나 논단을 분석해보면, 내용 자체의 문제 이전에 조야한 논리 전개가 드러난다. 기령 외부 필자로서 칼럼을 기고한 박철희(서울대 대학원 교수)는 “유권자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2008년 3월 21일 34면) 제하의 칼럼에서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며 묘하게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를 떠올린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개혁’으로 규정하고 ‘기득권 구조’ 타파와 연결짓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기득권 구조 타파’는 논리적 모순관계이고, 실제로 ‘고이즈미 개혁’은 일본 내부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내부 필자들의 칼럼에 나타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정성희(논설위원)가 쓴 “횡설수설 / 대문호 연암(燕巖)”(2007년 7월 25일자 34면)은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許生傳)』을 소개하며 “남산골에 사는 허생은 변씨(卞氏)한테서 빌린 금 10만 냥으로 장사를 해 거금을 모은다. 그는 이 돈을 백성에게 다 나눠주고 20만 냥을 변씨에게 갚은 뒤 변씨 등과 함께 경제치국(經世治國)을 논한다”고 간추렸다. 이어 “허생의 치부술(致富術)과 부국이민(富國利民)의 근대적 경제관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면서 연암을 “우리나라 최초의 신자

9) 칼럼은 먼저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친구 박제가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를 소개한다. “진채(陳蔡) 땅에서 곤액(딱한 사정)이 심하니, 도를 행하느라 그런 것은 아닐세. (중략) 이 무릎을 굽히지 않은 지 오래되고 보니, 어떤 좋은 벼슬도 나만은 못할 것일세. 내 급히 절하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여기 또 호리병을 보내니 가득 담아 보내줌이 어떠하실까?” 이어 “여러 날 굶었으니 돈을 꾸달라는 부탁인데 이왕 돈 꾸주는 김에 술도 보내라는 내용인즉, 그 은유와 해학이 놀랍다”고 쓴다. 이어 『허생전(許生傳)』을 소개한다.

유주의자”라고 규정한다. 논평은 주관적 시각이 개입한다고 치더라도 『양반전』으로 당시 지배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실학자 박지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자유주의자’로 규정되는 것은 역사적 맥락과 전혀 동떨어진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문의 ‘전진우칼럼’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2007년 6월 30일 30면)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는 우리가 싫다고 거스를 수 없는 상수(常數)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현실로 단정 짓는다. 그가 칼럼을 쓴 시점에, 베네수엘라나 스웨덴처럼 신자유주의와 다른 체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던 국제 정치경제의 객관적 흐름을 아예 외면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김순덕칼럼’이다. 편집국 부국장의 직함을 지닌 그는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쓴 글 “5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2007년 11월 9일 35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신자유주의를 공산주의보다 사악한 이데올로기로 몰아붙이는 것 역시 자유다. 그러나 탈규제, 민영화 없는 나라에 내외국인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정부의 역할은 시장 주도에서 시장에 대한 친절한 지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해 반공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논리 전개다. 신자유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구성 오류를 범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대안과 관련한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주장이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김순덕칼럼’은 “개구리를 기억하세요” 제하의 글(2008년 2월 29일 31면)에서 부자 내각을 비롯한 편향인사에 거세게 일어난 비판 여론을 간단히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를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벌써 레임덕’ 같은 이명박 정부가 인사는 망쳤어도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선 천만다행이다. 작은 정부, 큰 시장 등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1979년 마거릿 대처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앞장선 이래 세계적으로 성공이 확인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부 차를 확대시켰을 뿐이라며 주체사상보다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을 위

해… (중략) 세계는 경쟁을 통해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파괴의 불안이 있기에 끊임없는 창조와 발전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 아니던가. 새 정부가 스마트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 참 좋겠지만 안 그래도 다음 선거까진 어쩔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시간에 내 경쟁력부터 키우는 게 남는 장사다.”

여기서도 신자유주의와 ‘주체사상’을 느닷없이 대비시킨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한 데 이어 독자에게 대통령을 비판할 시간에 ‘내 경쟁력부터 키우는 게 남는 장사’라고 권한다. 이 또한 신자유주의 아니면 주체사상이라는 양자택일로 다른 선택지들을 모두 무시하는 논리 구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단 『동아일보』나 『문화일보』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의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세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기피되고 있으며, 설령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 찬사이거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를 조야하게 반박하는 게 절대 다수다. 그런 언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확산해온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정환(2007)은 경제신문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맹목적으로 추동해왔다고 분석했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였고 글로벌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공기업 민영화, 대규모 인수합병,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축소 등을 밀어붙였”고, 그 연장선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¹⁰⁾

10) 이정환(2007)은 구체적으로 ‘경제=기업=총수일가’라는 도식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복지 축소를 주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한다. 공공부문에 효율의 잣대를 갖다 대고 수익 창출을 요구한다. 심지어 교육과 보건복지, 의료 부문까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 경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이야기지만 정작 여기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경제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 복지 지출

경제신문에 대한 이정환의 분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제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세 신문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단순하면서도 낡은 프레임을 경제 문제 전반에 들이대고,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며, 무한 경쟁의 시장 원리를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문해왔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언론이 규제완화, 민영화, 법인세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를 ‘글로벌스탠더드’로 일관되게 제시해 여론화하면서, 정작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임을 은폐하는 데 있다.

<표 6> 1년간 신자유주의 관련 주제 사설 비율

구분	신자유주의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유연화	계
동아일보	0	23	39	12	9	83
문화일보	1	18	50	12	4	85
계	1	41	89	24	13	168

<표 6>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배제는 실제 신문 지면에서 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감세, 복지 축소, 작은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보도와 논평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은 기간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사설을 분석해보자. 신자유주의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었던 『동아일보』는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사설을 23건이나 썼다. 『문화일보』도 18건을 써서 공기업과 금융기관 ‘민영화’를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주문했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설은 『동아일보』가 39건, 『문화일보』가 50건이나 내보냈다. ‘감세’는 두 신문이 모두 12건의 사설을 편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동아일보』 9건, 『문화일보』 4건이다. 결국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신자유주의’ 언급은 사실상 전혀 하지

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않으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 내용들은 적극 여론화해나갔다. 단순 산술비교로 하면 두 신문에서 168배의 현저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두 신문이 의도했든 아니든 공기업 민영화, 대기업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가로막았다는 게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셈이다.

바로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집권당의 대표가 방송에서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밝히는 모습과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은 닮은꼴이다. 권력과 언론이 경제 쟁점에 대해 일방적이고 단편적 정보만 부각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정책이나 실천이 구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다른 경제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글로벌스탠더드’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지속적으로 여론화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루카치는 “사회생활의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역사적 발전의 계기로 총체성 속으로 통합시키는 연관 속에서만 비로소 사실들의 인식은 현실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Lukacs, 1920, p.74). 굳이 총체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저해하는 언론의 모습은 구체적 현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전개되는 실제와 어긋나 있다.

신자유주의를 앞장서서 전파하는 언론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기피 또는 은폐해온 사실을 비판하는 게 비판언론학의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4. 신자유주의와 비판언론학의 연구

문제는 한국 언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공론장으로서 최소한의 구실조차 전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논리

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데도 비판언론학계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데 있다.

이는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논문을 분석해보면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논문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제목에서 언급한 논문은 단 1건이다. 주요 논점을 제시한 초록에서 언급한 논문은 3건이고, ‘키워드’ 검색으로는 한 건도 없다.

제목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유일한 논문은 김예란(2002)의 『사회적 담론공간 분석: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담론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잡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담론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신자유주의 문제를 본격적 또는 총체적으로 다룬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초록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연구는 김은규의 논문이 2편이다. 김은규(2006a)는 “21세기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의 역사적 맥락과 의제 검토” 제하의 논문에서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가 제시하는 정보 질서의 패러다임을 분석했다. 논문은 WS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칫 장밋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 준다”면서 그 이유로 “WS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은규(2006b)는 이어 “문화시장 개방, 국제규범, 글로벌 거버넌스” 제하의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시장개방 촉진자’들과 반대자들의 논리를 비교한 뒤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다른 논문은 이남표·김재영(2006)의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이다. 논문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재고찰’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징과 맹점을 밝히고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을 제안한다.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의 문제점, 능동적 수용자론의 왜곡, 수용자 상품론의 한계”를 짚은 뒤, 수용자 중심의 정책 이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논문들은 모두 가치 있는 연구 주제들이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한국언론학회로 눈을 돌려보아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기간 한국언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언론학보』에서 ‘신자유주의’를 제목이나 초록에서 언급한 논문은 4건이다.

하윤금(2004)은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와 미디어 산업』 논문에서 2004년 방송법 개정으로 확대된 외국 자본 진출 문제에 대한 의미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구자는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와 진출을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융 세계화 현상에 의한 금융자본의 증가와 금융 거래의 증가,

그리고 금융자본을 통한 이윤 추구의 현실을 분석했다. 논문은 “이미 개방된 통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부분에서 창출된 이윤에 기생하여 미디어 산업 영역을 피폐화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논문이다.

김은규(2005)는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시민사회 진영은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을 전개했다”고 진단한 뒤 “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활용 전략”을 집중 탐색했다.

문상현(2005)은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의 담론적 구성과 그 함의」 논문에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낳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를 불평등한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구자는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은 정보통신기술과 발전 간의 직접적이고도 인과적인(causal) 연관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그런 담론이 “기술과 발전의 관계에 대한 도구주의적이고 기술결정론적인 인식과 신자유주의적인 편향에 기반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특히 국제적 논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종속됨으로써 국가 및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류의 보편적 발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유용민·김성해(2007)의 논문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신자유주의담론과 미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는 “최근 노동운동의 정당성 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구성하고, 노동운동 보도를 프레임, 보도태도, 핵심가치로 나눠 분석했다. 논문은 미디어의 노동담론이 신자유주의 담론과 역사적으로 접합해왔으며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를 분석했다. 『조선일보』가 “노동운동을 구시대적 낙오자, 개혁방해세력, 불법이익 집단으로 프레임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경쟁력, 국익, 효율성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2008년 상반기까지 언론학계가 신자유주의를 구체적 저널리즘의 양상과 관련해 분석한 논문은 『한국언론정보학보』와 『한국언론학보』를 더하더라도 유용민·김성해의 논문 1편이다.¹¹⁾

물론, 넓게 보면 앞서 소개한 논문들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과 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다룬 논문을 비롯해 정치경제학적 연구와 문화 연구들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언론학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는 선부르고 균형을 잃은 분석일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분석했듯이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만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신자유주의’를 논문 제목으로 삼거나 초록이나 키워드에서 부각할 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과 저작이 적지 않은 사실과 견주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더구나 구체적 저널리즘을 신자유주의로 비판한 유일한 논문이 “경험론적 실증주의 중심이던 언론학 영역에 비판언론학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학회보가 아닌 『한국언론학보』에 실린 사실도 성찰해볼 대목이다.

5. 신자유주의와 ‘촛불 공론장’의 표출

기존 언론과 언론학계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외면했지만, 그 폐해를 몸으로 겪고 있던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의식이 퍼져가고 있었다. 기존 언론에 ‘억압’

11) 그 점에서 연구자도 비판적 성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신문과 월간지에 언론비평을 쓰거나 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언론’을 줄곧 비판해 왔으면서도, 연구자 또한 『한국언론정보학보』에 투고한 논문들에서는 ‘한국 저널리즘의 실체적 위기’를 분석하며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의제화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손석춘, 2006)했을 뿐 그것을 신자유주의와 연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되어 있던 신자유주의 문제점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사건이 바로 촛불 집회다.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0회에 걸쳐 일어난 촛불 집회에서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구독거부에 이어 ‘광고불매운동’까지 벌어진 사실은 수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입증해주었다.¹²⁾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와 논평을 분석해보면, 미국산 쇠고기와 신자유주의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둘 다 한국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옳다. 하지만 촛불 집회참가자들은 광우병 자체를 신자유주의의 산물로 파악했다.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인간과 더불어 살아온 소에게 갑자기 20세기 말에 광우병이 발병한 배경에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똥을 사료로 먹이는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당시 대처 총리가 이끄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식품위생 안전기구를 ‘민영화’해 검역을 소홀히 함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했다. 기실 신자유주의 논리는 농수산물과 식료품 전반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민영화’와 교육의 경쟁 강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실제로 촛불집회에서 공론장 구실을 한 『미디어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는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글들이 날마다 올라왔다. 하지만 기존 언론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계속 외면했다.

12)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2008년 5월 2일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는 “反美(반미) 反杼(반이)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제하의 사설(5월 3일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미 감정을 증폭시킨 ‘효순 미션양 촛불시위’처럼 번지는 양상”이라며 “미국 얘기만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을 찾아내 부풀리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5월 5일 사설 제목은 숫제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이다. 5월 10일자에선 사설 제목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배후세력 누구인가” 추궁하며 “일부 세력이 벌이는 ‘광우병 공포 세뇌’는 북한의 선전선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근거 제시도 없이 촛불집회에 과도하게 색깔을 칠하는 언론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거센 비판은 필연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표 7> 촛불집회 100회 동안 ‘신자유주의’ 언급 건수
(기간: 2008년 5월 2일~8월 16일)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1	0	2	3
칼럼-논단	5	3	29	26
계	6	3	31	29

첫 촛불집회부터 100회(8월 15일)까지 언론 보도(2008년 5월 2일~8월 16일)를 분석해보자.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오직 1번 언급했다. 『문화일보』는 전혀 없다. 칼럼과 논단에서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 언급한 것 또한 긍정적 맥락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칼럼과 논단은 각각 31건과 29건이다. 하지만 두 신문 또한 신문사의 주장을 담은 사설에선 신자유주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¹³⁾ 촛불 공론장 구실을 한 <아고라>에 날마다 쏟아진 신자유주의 비판 글들과 비교할 때, 진보언론으로 불리는 신문들조차 촛불집회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 소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기간 동안 ‘반미’를 언급한 의견들은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건수를 압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반미 언급이 신자유주의 언급의 11배, 『문화일보』의 사설과 칼럼은 10배 이상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사설도 ‘신자유주의’에 비해 ‘반미’를 5~6배 언급하고 있다. 물론, 두 신문의 ‘반미’ 언급은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거대언론의 프레임에 갇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실 신자유주의를 외면하거나 촛불 공론장에 낡은 시대의 이념공세를 펼쳤던 주체는 한국 언론이나 언론학계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반대해 촛불시위가 한창 벌어지던 때 정년퇴임한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고별강연에서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한국

13) 두 신문이 신자유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집회가 사실상 끝난 뒤 미국의 금융 위기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2008년 9월 이후다.

<표 8> 촛불시위 100회 동안 ‘반미’ 언급 건수
(기간: 2008년 5월 2일~8월 16일)

구분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11	17	11	18
칼럼·논단	21	15	15	21
계	32	32	26	39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대학에 어떤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학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동하는 본산이자 동시에 그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가 그대로 집중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08년 6월 21일자).

실제로 주요 신문에 신자유주의 내용, 곧 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감세, 복지 축소, 작은 정부론을 적극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직 대학교수들이다. 주류 학계와 거대 언론이 정치권력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논리를 적극 옹호해온 것이 그동안의 전개 과정이었다. 바로 그렇기에 비판언론학의 시대적 임무는 더 절박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계와 학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였다.¹⁴⁾

6. 논문의 한계와 비판언론학의 과제

앞서 분석했듯이 비판언론학의 정체성 문제는 언론학자들 개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학자 손호철(1999)이 지적했듯이 “두뇌한

14)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은 여전히 완강하다. 바로 그렇기에 미국 금융 위기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그 증거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국(BK)21이란 이름 하의 ‘바보 한국 21’ 정책 등 대학과 학문을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려는 한심한 대학교육 개악정책들”이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학계 또한 그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언론과 언론학계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다루지는 못했다.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근거해 ‘신자유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저널리즘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밑절미로 비판언론학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데 그쳤다. 그 점에서 이 논문의 한계는 뚜렷하다.

다만 신자유주의 담론으로 스스로 무장한 언론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일상적으로 해석하고 여론화해나가고 있다는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비판언론학의 과제를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비판언론학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무릇 비판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에서 시작했고 그 바탕은 ‘역사적인 비판’이었다. 역사적 비판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형성물들의 경직된 모습, 자연적인 모습, 생성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해소시켜 버리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생성에 종속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몰락할 운명에 있는 것임을 드러내”(Lukacs, p.129)는 방법이다.

아도르노도 비판 이론의 고전이 된 『계몽의 변증법』에서 자본주의적인 생산은 소비자들의 육체나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도록 묶어 놓는다며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로부터 부과된 도덕을 지배자들보다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만당한 대중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욱 성공의 신화에 사로잡힌다”고 분석했다(Adorno, 1947, pp.202~203).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성공의 신화’에 사로잡혀 신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비판이론의 고전들이 주는 의미는 새롭다.

물론 비판이론이 반드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연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적어도 분석해야 옳다. 한국 사회에

서 1997년 이전까지는 국민소득에서 임금 몫이 차지하는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추세, 소득 분배 불평등의 개선 추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들이 나타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단되거나 역전되어온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정성진, 2005, 23쪽).

더구나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가 펼쳐간 유럽과 달리, 복지 정책이 온전히 실현된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일뿐더러 현실에선 국민 대다수인 민중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살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OECD국가들 가운데 1위가 된 사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이론적 근거와 방안을 제시할 과제는 다름 아닌 비판언론학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살벌한 경쟁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언론이기 때문이다(손석춘, 2007).

둘째, 신자유주의 언론에 대한 비평 활성화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들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언론’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에 대한 비평작업은 주로 시민언론운동 단체와 일부 신문과 방송의 미디어 기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비판언론학계가 ‘미디어 비평’ 작업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널리즘 비평’을 학회지에 담기 어려운 데 있다.

학회보를 현행과 같은 일률적 편집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 편집을 더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획 논문’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저널리즘 현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비판이론에 근거한 저널리즘 비평을 학계 차원에서 적극 담아낼 방안에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

셋째, 언론비평만이 아니라 언론학계 내부의 상호비평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학회보를 통해 언론학자들의 논문이나 신문 기고문에 대한 비평 작업을 더 활발하게 해나가야 옳다. 신자유주의적 언론 질서를

옹호하는 언론학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 상호 간의 비판을 삼가면서, 언론에게 상호비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흔히 언론계는 물론, 학계 일각에서 언론비평을 보수와 진보의 담론 싸움 정도로 희화화하거나, 정파성의 잣대로 단순화해 파악하고 넘어가기에 더욱 그렇다.

학계 내부의 상호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언론학자들 사이에 미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당한 비판’을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된 ‘정당의 비판’으로 ‘이해’하게 된다. 언론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언론학자들 사이에 상호 비판이 필요하고, 학계에 그 문화를 뿌리내려갈 주체는 다름 아닌 비판언론학자들이다. 비판언론학자들이 전국 대학의 언론학과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기에 의지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학과와 저널리즘 현장의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연구자가 언론 현업인 출신이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제안이지만, 저널리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언론관련 학과에서 배제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론사에 신규 채용될 예비 언론인들을 양성하는 게 한 목적인 언론학과에서 저널리즘 실무 경험은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작 비판언론학계가 ‘학술 논문’의 양적 실적이나 ‘연령’ 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학계 유입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과에 언론 현장 경험을 가진 교수가 한 사람도 없거나 보수 편향적인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현장과 학계를 이어주는 구실 또한 비판언론학계가 열린 마음과 적극적 의지로 나서야 할 영역이다.

이 논문이 분석을 마감한 2008년 8월 15일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융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의 한계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와 저널리즘 상황은 비판언론학계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줄곧 보편적 틀(frame)로 해석해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더불어 비판언론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Ⅰ 참고문헌

- 강내희 (2008). 문화와 시장.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연구』, 제5권 제2호, 235~258.
- 강상구 (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 문화과학사.
-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1998).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서울: 문화과학사.
- 김서중·김은규 (2008). 한국언론정보학회 20년, 비판적 학술운동의 고민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3권, 47~80.
- 김예란 (2002). 사회적 담론공간 분석: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8권, 7~36.
- 김은규 (2005).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5호, 254~282.
- _____ (2006a). 21세기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SIS)의 역사적 맥락과 의제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4권, 34~62.
- _____ (2006b). 문화시장개방, 국제규범,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5권, 7~35.
- 문상현 (2005).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의 담론적 구성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보』, 제49-6호.
- 손석춘 (2006).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6권, 42~77.
- _____ (2007).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서울: 시대의 창.
- _____ (2008). 『주권혁명』. 서울: 시대의 창.
- 이남표·김재영 (2006).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3권, 193~225.
- 유용민·김성해 (2007).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신자유주의담론과 미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4호.
- 이정환 (2007). 경제신문은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 선전물인가. 『미디어오늘』, 2007년 12월 26일자.
- 이효성 (2008). 비판이론의 비판 개념: 그 사적 계보, 유형, 및 대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정성진 (2005).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서울: 책갈피

하윤금 (2004).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와 미디어 산업-케이블TV의
외국투자에 관한 비판 정치경제학적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제48-5호,
161~187.

Adorno, T. & Horkheimer, M. (1947). *Dialektik der Aufklarung*, 김유동 옮김 (2001).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Dume'nil, G. & Le'vy, D. (2005). *Crise et sortie de crise: ordre et desordres neoliberaux*,
이강국·장시복 옮김 (2006). 『자본의 반격』. 서울: 필맥.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최병두 옮김 (2007). 『신자유주의』.
서울: 한울.

Lukacs, Gyorgy (1920).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박정호 옮김 (1999). 『역사와
계급의식』. 서울: 거름.

Moody, Kim. (1997). *Workers in a Lean World*, 사회진보를 위한민주연대 옮김 (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서울: 문화과학사.

Roy, Arundhati (2002). *Complete Essays*, 박혜영 옮김 (2004). 『9월이여 오라』. 서울:
녹색평론.

Schiller, Dan (1999). *Digital capitalism: networking the global market system*, 추광영
옮김 (2001). 『디지털자본주의』. 서울: 나무와 숲.

Stiglitz, Joseph, E. (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홍민경 옮김 (2008).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서울: 21세기북스.

(투고일자: 2008.11.29, 수정일자: 2009.01.08, 게재확정일자: 2009.01.19)

A Critique on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and Journalism Focused on the Neoliberalism in Korea

Seok-Choon Sohn

The Director

(The Institute for New Society)

The purpose of this essay explores a critical review of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and Journalism focused on the neoliberalism in Korea. The majority of social member in Korea does not know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just recognize it as a 'global standard.' This essay is analyzing Korean journalism which causes this phenomenon primarily.

Nonetheless,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was negligent in criticism on journalism. Any research paper i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was not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neoliberalism and journalism

At last this essay proposed that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should establish their identity themselves to critically analyze the journalism trying to protect the neoliberalism in one way, and become more critical to the press itself to raise the relationship with journalism spot.

Key words: neoliberalism,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journalism